

#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로 지정을”

### 권익현 부안군수 “지역 산업용지 부족 해소 최적인 대승적 차원에서 변환해야 국가경쟁력 확보에 도움” 도·새만금청과 협의 후 국무총리실 찾아 설득키로

권익현 부안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20일 오전 10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진우 부안군 새만금도시과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부안군의 발전을 염원하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김정기, 김슬지 도의원, 부안군 의원 등 30여명 등이 참석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지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서 “대한민국 새만금 사업은 단순한 간척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비전을 품고 있다.”며, “이러한 기대 아래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1991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새만금은 부안군민들에게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한과 애증의 상징”이라며, “새만금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대하여 고향에서 풍요로운 삶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무거운 대가와 많은 희생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희생에는 부안군은 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제공하기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장석산을 희생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상실했고,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내측 어항 6개소와 드넓었던 갯벌 3,246ha가 소멸되어 부안군의 특산품이었던 백합과 바지락, 동죽 등 어패류가 사라져 어민들의 생계 기반이 파괴됐다.”

고도 했다.

또한, “내부 매립에 사용된 준설토는 복서풍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계화, 하서, 동진 지역에 농작물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변산 해수욕장과 격포 해수욕장, 고사포 해수욕장 등은 해안침식과 수질 악화로 관광객 감소 등 부안의 관광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예로부터 조기잡이의 황금어장이었던 위도 앞바다 칠산어장의 어업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부안군민들은 새만금이 열어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굳게 믿고 있으며, 부안군의 영원인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가 산업용지로 지정되고 친환경 국가산업단지 조성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진정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주 열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 방향 중간 보고회’에서 국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산업용지 수요는 44k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 계획상 태양광 부지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18km에 불과해 총수요 대비 25km가 부족하며, 산업용지가 연평균 1.5km씩 소진될 때 30년이 되면 기업들에 공급할 용지가 없게 되는 것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이 가능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는 최적의 대안이자 기회의 땅임이 분명하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김정기·김슬지 도의원과 다수의 군의원들이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지정 촉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권익현 군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다.”고 말하며, “국토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 개발’을 국가산업단지 지정요건으로 제시하였고, 인근 지자체보다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안군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산업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군수는 “더불어 농생명용지 7공구는 이미 18km의 매립이 완료되어 즉각적인 산업용지 제공이 가능하며, 부안 일원의 2,46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이 가능하며, 새만금 철도, 신항만, 공항, 남북도 등의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새만금 수변도시와 부안을, 하서면, 계화면에 인접해 적절한 주거 접근성과 문화 여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스마트 농업법, 산업 집

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업단지에 스마트 팜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과 농업이 상생하고 혁신하는 융복합산업 조성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끝으로 “이제 정부는 새만금 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 복합용지로 개발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새만금 사업의 원대한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하여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중심지로 도약시키는데 기여해야 하며,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부안군의 요구를 수용하고 새만금 사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는 부안군의 앞바다를 매립하고 있는 땅으

로 1,848ha로 약 561만평이나 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생명용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 쌓여 남아있는 실정으로 농생명용지보다는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국가 미래 발전 전략상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산업용지로 변환된다면 해상풍력단지까지 인근에 조성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기지가 조성 가능해 입주한 수출기업에게는 RE100 달성 등으로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무엇보다 우수한 교통 접근성 확보로 인하여 산업비용이 크게 절약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소멸 극복에 도움이 되어 지역주민 고용 확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만호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원안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 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가 청년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청년층의 성별, 연령별 다양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청년창업의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육성 방안 △청년창업에 적합한 사업 발굴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자금 지원 및 경영 자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청년창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전문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지원 △창업 공간 지원 △재정 및 특별보증 지원 △판로 확대 및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

### 임종명 도의원,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조례안 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119구급 서비스 이용에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영유아, 거주 또는 생계 활동을 위해 체류 중인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 등록 맞춤형 상황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청각·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담았다.

또한 구급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인력의 교육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만호 기자

##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국제교육원으로 활용 속도내나

### 김슬지 도의원, 긴급현안질문 통해 도·교육청에 활용 촉구 김 지사 “행·재정적 지원 약속”, 서 교육감 “도와 협의, 긍정 검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20일 제 415회 정례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지난 6월 준공 이후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이하 리더센터)를 전북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교육원으로 전환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슬지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에게 전북자치도가 한국 스카우트 연맹과 작성한 이행보증서와 관련된 법적 효력과 의무이행 여부 및 보증서와 관계없이 한국스카우트 연맹이 리더센터 위탁을 맡길 수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법률자문 결과 이행 의무가 없으며, 운영비 지원 등 리더센터 운영과 관련된 도와 연맹과 의견이 달라 위탁이 어

렵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리더센터 활용을 위해 다양한 검토를 했으나, 사실상 상 전복교육청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도 교육청이 리더센터를 활용하게 될 경우 행·재정적 협조에 대한 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전복교육청에서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슬지 의원은 서거석 교육감에게 보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신장을 위해 국제교육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전환해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여러가지 제약이 있지만,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으로서 국제교육원으로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전북자치도청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자치도의회-전북자치도도-전복교육청이 전북의 청소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캠버리의 유산인 리더센터를 전북의 청소년을 위한 국제교육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캠버리 파행의 진실을 밝히고 전북의 명예를 되찾는 시작점이 리더센터의 정상 운영”이라고 강조하며 “전환 작업이 순조롭게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지역 첨단산업 육성 위한 산업용지 확대를”

### 김정기 도의원,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새만금 지역의 급증하는 기업 투자 수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변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정기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첨단 산업과 재생에너지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새만금 지역은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

전과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상 산업용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급증하는 기업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부족한 상황”이라며, “새만금 철도, 신항만, 공항, 남북도, 동서도로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기반으로 물류와 제조업 등 활성화되면 기업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의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용수 공급 여건이 양호한 농생명용지 7공구(18km)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용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새만금개발청 중간보고회에서도 새만금 지역의 산업용지 수요와 공급 현황에 대해 논의되었다. 새만금 계획 재검토 결과 산업용지 총수요는 약 44km로 현 계획인 29km보다 25km 추가 필요한 상황이다. 끝으로 김정기 의원은 “농생명용지 7공구는 매립이 완료돼 용지 변경이 신속히 가능하며, 교통과 전력·용수 공급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면서, “특히,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이 가능해, RE100 산단의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이만호 기자

## “유보통합 3법, 전면 재검토를”

### 국주영은 도의원, 건의안 발의... “현장 혼란 초래”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는 의무사항 법제화 지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20일 진행된 제 4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현재 유보통합 지방 단위 사무기관을 위해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유보통합 3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제시한 지방 단위 사무기관 방안이 무산된 이후 이번에는 정부의 계획이 담긴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유보통합 3법의 경우 현재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기관 간 재정 및 인력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의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격화시킬 우려가 크다.

현재 교육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유보통합 3법을 살펴보면,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지자체 재정이란 등의 의무사항을 법제화했고, 2026년 7월까지 유보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 정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며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관련 정책이 본격적

으로 추진될 시 영유아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우려된다.

또한, 관련 사업 수행 시 대부분의 사업이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함께 병기되어 있는데, 이 경우 사업 운영주체에 대한 현장의 혼란과 함께 예산지원에 대한 갈등, 인력 충원 및 인건비 지원 주체의 문제, 일부 사무 주체에 대한 기관 간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국주영은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유보통합에 따른 지방 사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재정은 교육재정에서 부담할 것과 인건비의 경우 인력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인력 충원과 인건비에 대해 교육청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관련 법령안들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발의된 유보통합 3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그러나 오랜 기간 분리되어 있던 기관이 통합하는 과정이 일방적이지는 않아야 할 것이며,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조례 개정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진형석 도의회 교육위원장 완산초 초 학교운영위와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지난 19일 오후 전주완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학교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진형석 위원장은 전주완산초등학교 학교현안에 대하여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공동체 주체 사이의 갈등과 협연에 대립으로 더 심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교육현실임을 진단했다. /이만호 기자